육아정책 Brief

통권 제76호 | 발행인 : 백선희 | 발행일 : 2019년 9월 9일 | 발행처 : 육아정책연구소

저출산 대응 주거 지원, 신혼부부에서 육아가구로 확장해야...

Ⅰ. 문제 제기

저출산 지원 정책의 주거 지원 정책은 청년과 신혼부부에 집중되어 있음

- 현재 저출산 주거지원 정책은 미혼 청년층의 높은 정책적 요구에 부응하여 신혼부부에 대한 행복주택 공급 확대, 공공임대주택, 기업형 민간임대 등 주택 특별공급 지원과 주택자금 대출 지원 등이 있음(대한민국 정부, 2016[1]: 61~63).
  - ▶ 이에 비해 현행 영유아가구에 대한 주거 지원은 개별 가구에 대한 주택 지원보다는 주로 아이키우기 좋은 주거지 여건을 조성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음(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18[2] : 28).
- 이러한 저출산 주거지원 정책은 혼인 이행 단계(청년·신혼부부)의 주거지원에만 초점을 두면서 실제 결혼 과정 혹은 출산 이후 가족 구조의 확대를 고려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김종훈 외, 2018[3]: 34)는 지적이 일고 있음.
  - ▶ 기혼 여성(15~49세)의 52.2%가 현재 거주 주택의 구입 및 임차를 위해 융자받았다고 응답했으며, 특히 자가인 경우에는 62.3%가 융자를 받았다고 함(이소영 외, 2018: 63[4]).
  - ▶ 반면, 초혼 당시 본인 및 배우자가 신혼집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은 비율은 29.6%로, 현재 상태에 비해 높지는 않음(이소영 외, 2018: 100)[5].

실제 주택 마련에 대한 욕구는 자녀 출산 이후에 크게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 육아 가구에 주거 지원 정책의 확장이 요구됨

- 자녀의 출산으로 가족이 확대됨에 따라 주거 요구와 선호가 달라질 수 있고, 주거가 양육 만족감과 삶의 질 체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할 때, 영유아가구의 주거 현황, 주거비 지출, 주거 요구에 기반한 지원 방안의 수립이 필요한 시점임.
  - ▶ 현행과 같은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집중된 주거 지원은 협소한 공간이나 취약한 주거 여건 등으로 인해 육아가구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음.
  - ▶ 영유아가구의 특성과 요구에 부합하는 정책 지원 방안이 무엇인지 모색하여, 영유아가구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간과되어서는 안될 부분임.

---

* 본고는 육아정책연구소 『영유아 가구의 소비실태조사 및 양육비용 연구 (최효미·강은진·조미라·조숙인·김태우, 2018)』에 기초하며, 제시된 수치는 동 연구에서 실시된 KICCE 소비실태조사 조사 결과에 근거함.

1) 대한민국 정부(2016). 2016-2020 제 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2018).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
3) 김종훈·이지혜·박종서·이상림·이소영·변수정·김은정(2018).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보완 연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한국보건사회연구원.
4) 이소영·김은정·박종서·변수정·오미애·이상림·이지혜(2018). 2018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5) 다만, 초혼 시기가 최근일수록 이 비중이 높아져 2014~2018년에 결혼한 경우에는 대출을 받았다는 응답이 50.2%에 달해, 혼인 초기 주택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감이 가중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음.

Ⅱ. 영유아가구의 주거 현황 및 주거비 지출

주택 구입 및 주거비는 자녀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증가하며, 특히 초등이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 현저한 차이를 보임

● 전반적으로 자녀수가 많을수록, 자녀 연령이 높을수록 자가 비중이 높아지는 특징을 보이며, 자녀의 성장에 따라 주택 구입 비중이 증가하며, 이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됨을 짐작케 함.

▶ 영유아가구의 현재 입주 형태는 자가인 경우가 55.1%, 전세 27.2%, 월세 17.7%로 자가 비중이 절반 이상임.

▶ 자가 비중은 자녀가 2명이면서 영아+초등이상자녀가 있는 경우 72.9%, 유아+초등이상인 경우 66.9%, 자녀가 3명이상이면서 영유아+초등이상 자녀가 있는 경우 64.3%로 영아 혹은 유아 자녀만 있는 경우에 비해 높은 비중을 보임.

〈표 1〉 자녀 수 및 자녀 구성별 주거 현황

단위: %, (명)

		전체	1명			2명				3명	
			영아	유아	영아만	유아만	영아+유아	영아+초등이상	유아+초등이상	영유아만	영유아+초등이상
입주형태	자가	55.1	45.8	53.9	49.5	58.2	49.3	72.9	66.9	50	64.3
	전세	27.2	36.5	28.3	29	27.5	30.3	12.9	20.3	26.9	15
	월세	17.7	17.7	17.8	21.5	14.3	20.4	14.3	12.8	23.1	20.7
계 (수)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648)	(1,334)	(1,304)	(1,107)	(1, 91)	(1,284)	(1, 70)	(1,266)	(1, 52)	(1,140)

주 : x^2는 58.822로 0.1% 유의수준에서 유의함.

영유아 가구의 주거비는 평균 25만 3천원이며, 가구 소득이 높일수록 슈바베지수도 낮아지는 특징을 보여 저소득 가구에서 주거비 부담이 가중됨을 알 수 있음

● 생활비 중에서 주거/관리비가 차지하는 비중(슈바베 지수)는 8.7로, 가구소득이 높아질수록 낮아지는 특징을 보임. 즉, 가구소득이 낮은 가구일수록 주거/관리비로 인한 부담감은 커짐을 알 수 있음.

▶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주거비 총액은 미묘하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데, 주로 소득이 높은 가구일수록 관리비 및 수도/광열비 지출이 증가하는데 반해 소득이 낮은 가구일수록 월세 지출이 많아지는 특징을 보임.

▶ 한편, 원리금 상환금은 월평균 19만6천원으로,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오히려 금액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임. 이는 가구소득이 낮은 가구는 주택 구입 자체를 하지 못하고 월세 등이 형태로 거주하는 것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됨.

▶ 반면, 생활비에서 주거/관리비가 차지하는 비중인 슈바베 지수는 자녀수가 많을수록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자녀수가 많을수록 주거/관리비 이외에도 다른 비목에 대한 지출이 많아져 주거 관련 지출에 있어 제약이 발생함을 알 수 있음.

〈표 2〉 영유아가구 주거비 지출 현황

단위: 만원, (명)

		주거/관리비 총액		세목별 주거/관리비		원리금 상환 (금융상품)	계
		총액 평균	생활비에서 차지하는 비중	관리비 및 수도/광열비 등	월세		
	전체	25.3	8.7	19.7	4.2	19.6	(1,648)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24.7	11.8	15.7	7.8	8.2	(223)
	300~399만원	23.6	9.1	18.4	4.1	17.4	(440)
	400~499만원	25.5	8.4	20.3	3.8	21.2	(384)
	500~599만원	26.5	8.2	21.2	3.9	18.8	(271)
	600만원 이상	26.8	7.0	22.3	2.7	29.2	(330)
	F	2.7*	35.9***	25.5***	5.1***	15.5***	
총 자녀수	1명	24.7	9.1	19.4	3.8	18.3	(638)
	2명	25.7	8.6	19.9	4.4	20.4	(818)
	3명 이상	25.8	7.9	19.8	4.9	20.8	(192)
	F	1.0	5.2**	0.7	0.6	0.8	

주: 총 1,648 가구에 대한 조사 결과이며, 원리금상환은 주택 관련 원리금 상환을 포함하는 가구 내 부채 상환 관련 전체 금액을 의미함.
* $p < .05$, ** $p < .01$, *** $p < .001$.

Ⅲ. 영유아가구의 주거 여건에 대한 생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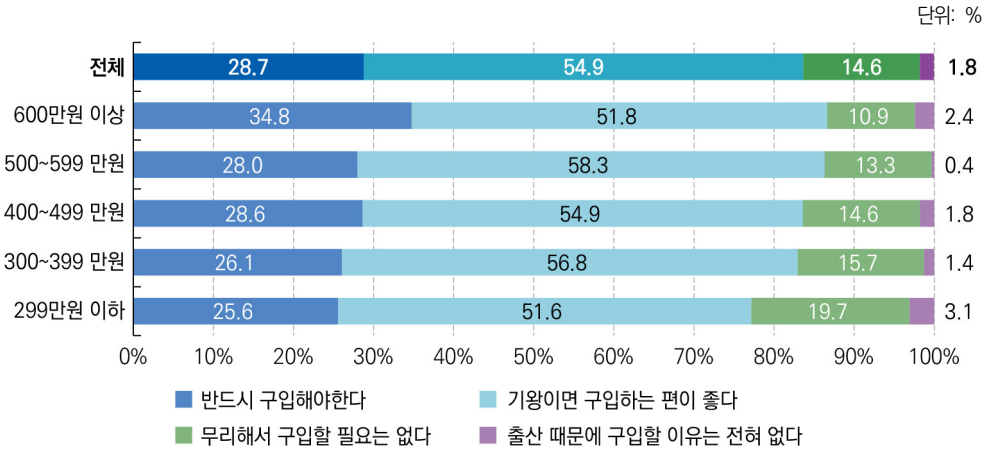
대다수의 영유아 부모들이 자녀 출산 이후 주택 구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함

● 가구 특성과 무관하게 전반적으로 영유아가구들은 자녀 출산 후에 주택 구입 필요성을 크게 느끼고 있음.

▶ 출산 후 주택 구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반드시 구입해야한다는 응답이 28.7%, 기왕이면 구입하는 편이 좋다는 의견이 54.9%에 달함.

▶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소득이 높을수록 주택 구입 필요성 쪽에 좀 더 높은 선호를 보임. 반면 그림에는 제시하여 않았으나, 자녀수와 무관하게 주택 구입의 필요성에 높은 선호를 보임.

[그림 1] 가구소득 수준별 자녀 출산 후 주택 구입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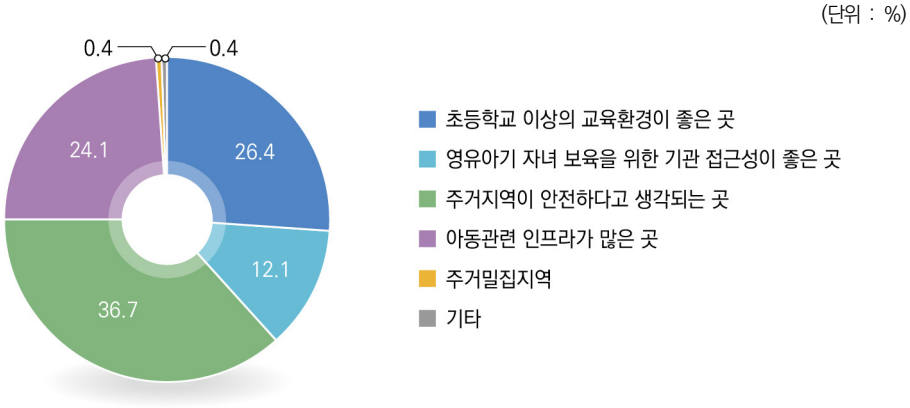


영유아 부모들이 생각하는 양육하기에 좋은 주거지 조건 1순위는 '안전한 곳'으로, 초등이상의 교육환경이나 지역내 아동 관련 인프라, 보육환경 등보다도 우선시 됨.

● 영유아 부모들이 생각하는 양육하기 좋은 주거지 조건은 안전한 곳이 36.7%로 가장 응답 비중이 높았으며, 이는 가구소득이나 총 자녀수 등과 무관하게 모든 영유아가구에서 일관된 양상을 보임.

▶ 다음으로는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환경이 좋은 곳(26.4%)로, 아동 관련 인프라나 보육기관 접근성보다도 자녀 성장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거주할 것을 감안하여 주거지를 선택하는 경향을 보임.

[그림 2] 양육하기에 좋은 주거지의 조건



Ⅳ. 정책 제언

육아 가구에 대한 주거 지원이 현재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저소득 가구와 다자녀 가구에 대한 주거비 지원의 확대가 요구됨

- 현재 저출산 지원 정책 중 주거 지원은 청년과 신혼부부에 집중되어 있으나, 자녀 출산 이후 주거 지원 정책의 마련이 요구됨.
  - ▶ 임대 주택의 경우 자녀의 성장을 고려할 때 육아가구에서 선호되지 않는 주택유형일 가능성이 높으며, 육아가구의 거주지는 전역에 걸쳐 흩어져 있어, 주택의 공급을 통한 주거 지원은 체감도가 낮음.
  - ▶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의 경우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차례에 한해 특별공급을 하는 지원 제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제1항)나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 등의 제도(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 15조)가 운영 중이지만,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육아가구가 많지 않다는 점에서 정책의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음.
  - ▶ 육아가구에 대한 주거 지원은 주택 자체의 공급보다는 주택 구입 시 비용의 일부(대출이자 우대, 이사 비용 등) 지원하거나 일상적인 주거관리비(전기요금, 상하수도 등[6])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육아가구의 정책 체감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 특히 생활비 지출 중에서 주거비 지출로 인해 양육비용 부담이 가중되는 저소득 육아가구에게는 일상적인 주거비 지원의 확대가 필요한 상황임.

육아 친화적인 도시 환경의 조성에 있어서는 보육시설이나 지역 인프라의 확충도 중요하지만, 교통이나 치안, 유해 환경 등으로부터 안전한 지역 사회의 조성이 보다 시급히 해결되어야 하는 현안이라고 사료됨

- 또한, 영유아 부모들이 응답한 바와 같이 자녀 양육을 위한 주거지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 '안전한 곳'임을 감안할 때, 지역 환경 조성 시에 아동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육아 친화적인 도시의 조성이 시급히 요구됨.
  - ▶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18. 12: 29)에는 육아가구를 위한 주거 지원으로 아이키우기 좋은 공공주택 및 기존 주거지 여건 조성이 주요 정책으로 제시되어 있으며, 주력 정책 사업으로 단지 내 커뮤니티시설과 아이돌봄공간, 육아·보육시설 등의 조성 등이 제시됨.
  - ▶ 전반적인 보육 및 육아 인프라의 확충은 돌봄 사각지대의 해소를 위해 매우 필수적 요소이기는 하지만, 육아가구의 희망 사항을 고려할 때 아동에게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교통, 치안, 유해환경 등)이 모든 지역에서 균질적으로 조성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시 되어야 할 것임.

최효미 부연구위원 hmchoi@kicce.re.kr

6)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에 대해서는 전기요금 감면이 시행 중(한국전력공사 약관)이며, 상하수도 요금 및 가수요금 등도 지역별로 감면해주는 지자체가 있음.